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하라”

윤수봉 도의원 대표발의 촉구 결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 참여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윤수봉 의원(완주1)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이 지난 14일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한국전력 공사는 분리징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수봉 의원은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돌연 대통령령의 말 한마디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과정 없이 돌연 분리징수가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너무나 급속한 추진의 사유가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가져올 직접적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공영방송 재원 대폭 감소

와 대안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공영방송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언론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결론 도출이 목적이 아닌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수봉 의원은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새만금 초입지 위치 관광단지 민자유치 조속히 추진해야”

김정기 도의원, “전개공 직접 시행시 재정상황에 타격 우려 현 단계선 민간주도 개발 필요... 초입지 개발 효과 증대”

새만금 챔버리 부지 바로 옆이자 새만금의 초입지에 위치한 새만금 관광단지가 매립 완료 2년이 지났지만 전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문제 제기에 나섰다.



공사가 직접 부지조성 및 분양 등 시행사로 나서기에는 무리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재정에 상당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기 의원은 “당초 해당부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한 새만금의 초입지이자 새만금의 첫 관문으로써 상징성과 의미가 깊은 장소”라며 조속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당초 전북개발공사가 사업행사로 직접 매립공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개발

따라서 현 단계에서 민간시행사로 조속히 변경해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초입지 개발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는 새만금 관광단지 부지의 주인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민간투자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새만금의 인허가절감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개발공사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새만금부지의 민간주도사업의 시급성이 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하루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 박일 정읍시의원 민주당 복당 신청

제9대 정읍시의회 의원선거에는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수성동·장명동 지역구)이 지난 14일 정치적 고향인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당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구절초공원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이에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에 누가 될까 봐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을 탈당해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지난 2월 2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고함을 확실히 인정받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믿고 능력을 믿고 5선 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수성동·장명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던 이유는 오로지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과 민주당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 저 박일의 정치적 고향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당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당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원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의정 책임성 강화... 임실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5명 위촉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임실군의회 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5명을 위촉했다.

군의회는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자문위원은 향후 2년간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해 의정을 자문하고, 의원의 윤리경쟁 및 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자문하게 된다.

이성재 의장은 “이번 기회로 임실군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며, “군민의 기대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 의식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WT 중앙훈련센터 운영 활성화 '맞손' 지난 1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김관영 도지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이 지정한 중앙훈련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국비 반영을”

도의회, 윤정훈 도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가결

윤 의원, 정부에 태권도원 활성화 적극 행동 촉구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이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 및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라북도나 무주군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재훈 기자

또한 전북도와 무주군이 태권도사관학교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태권도 단체의 집적화는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윤정훈 의원은 “태권도 단체의 무주 이전을 통해 태권도원의 위상 확보와 시설 운영 활성화 등 그간 영겨왔던 실태가 풀리도록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과 태권도 관련 단체의 무주 이전 그리고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 “고령친화사업, 전북특자도 미래 먹거리”

강동화 도의원, “도,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힐링 4대 분야 권역별로 특화 필요”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고령친화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정엔진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전라북도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화 의원은 “고령 인구비율이 전국 최고수준인 전라북도는 올해 초 겨우 관련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며 “전북도는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설정한 만큼 앞으로 국내외적 농생명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과 같은 생명산업 육성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또 “전북도는 현재 확보하

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해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힐링 등 4대 분야를 권역별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력있는 전담부서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도 고령친화산업의 실현과 선도를 위해서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미 2019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3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4%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대비책 마련을”

장영국 도의원 “삼중수소까지 검출 가능 검사장비 도입을”

“자연은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수산물 방류는 검사시스템 강화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산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장영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오염수 방류 후 우리들의 대비 자세를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장영국 의원은 “자금의 현실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국내에서

철저한 방사는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검사장비나 속도 면에서 아직 매우 많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압박해져 도민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곳곳으로 번지고 있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 유통돼 식탁에 올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영국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식탁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습과 요오드는 물론 삼중수소까지 검출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적극 도입·운영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위한 조속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현 폐교 관리정책 한계 분명해”

김정수 도의원 “매각 등 쇠신책 마련돼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까운 폐교 재산들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 철거, 매각 등 적극적인 쇠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그간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결국 방치 상태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번 민선8기 전북 교육청 또한 이를 의식해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큰 변화를 체감하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